

한국경제 경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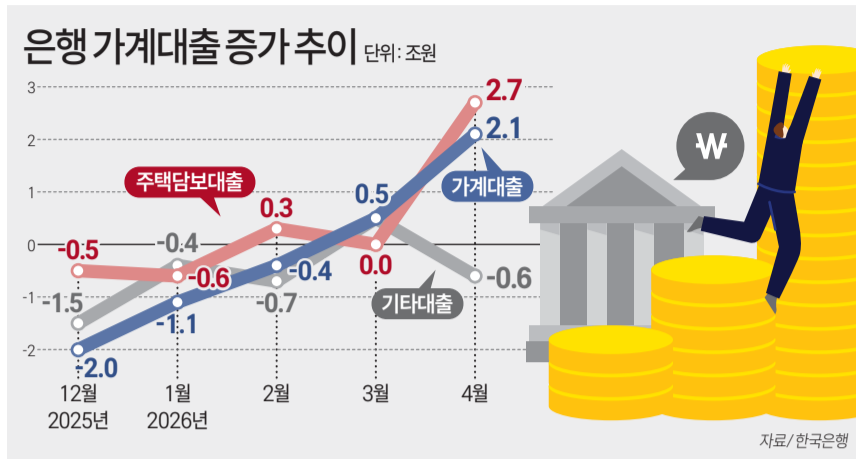
주담대·단기 자금조달 증가... 가계·기업 대출 12.8조 ↑

한은, 4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폭 커져
가계, 주택거래 증도금 등 영향
기업, 배당금·회사채 상환 반영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달 만에 증가폭을 키웠다. 연초 이후 주택거래 증가와 증도금 납부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담대가 2조7000억원 늘었고, 기업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수요 등으로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 5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확대됐다. 4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



보대출이다. 주담대는 지난 3월 보합수준에 머물렀지만 4월에는 2조7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연초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한 데다 증도금 납부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개인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대출상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인 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대출 증가폭도 커졌다. 4월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 규모(7조8000억원)를 웃돌았다. 4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397조7000억원이다. 대기업대출은 5조원 증가했다. 분기 말 일시상환분이 다시 취급된

데다 배당금 지급과 회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 수요가 반영됐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늘었다. 주요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 수요가 더해졌다.

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은 회사채에서 단기자금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회사채는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3조9000억원 순상환됐다. 반면 CP·단기사채는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발행과 회사채 상환 목적 발행 등으로 4조9000억원 순발행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4월 말 6599였던 코스피는 지난 14일 7981까지 오르며 8000선에 근접했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4월 중 미국·이란 간 휴전 합의 등으로 하

락했다가 하순 이후 다시 반등했다. 중동 협상 지연과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신 흐름은 은행과 자산운용사간 차별화가 나타났다. 4월 은행 수신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유출로 18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99조6000억원 급증했다. 주식형펀드가 국내의 주가 급등에 따른 평가이익 확대와 신규 자금 유입으로 55조7000억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MMF)도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빠져나갔던 법인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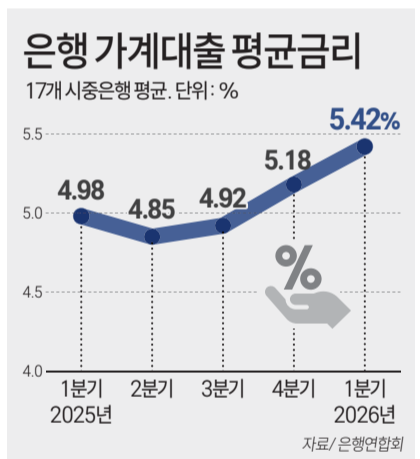
시장금리 지속 상승... 다중채무자 등 리스크 확산

가계·자영업자 금리상승 압박
"연체율 상승·상환능력 악화 위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가 늘면서 금리상승의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2019년 말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선 뒤 전반적으로 증가흐름을 이어오다 2023년 1764조4000억원에서



2024년 1분기말까지 숨고르기를 한 뒤 이후 7개 분기 연속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만큼 시장금리도 올랐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

에 따르면 올해 3월 17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42%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2025년 ▲1분기 4.98% ▲2분기 4.85% ▲3분기 4.92% ▲4분기 5.18%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오를 때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은 3조2000억원 늘어난다. 차주 1인당 연간 부담 증가액은 평균 16만3000원이다. 금리가 0.50%p오르면 6조4000억원, 0.75%p오르면 9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번 추산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 약 64.5%를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자영업자 사정은 더 팍팍하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기업대출 성격이 혼

재돼 있어 금리 상승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사결과 실제 대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늘고, 차주 1인당 연간 부담도 평균 55만원 증가했다. 금리가 0.50%p 오르면 부담은 3조5000억원, 0.75%p 상승 시에는 5조3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0.8%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매출 회복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엇갈리는 데다,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도 남아 있어 자영업자는 금리 상승의 압박을 가계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금리가 0.25%p 뛰면 이자 부담이 1조1000억원 늘고, 1인당 연간 부담은 64만원 증가한다. 0.50%p 상승 시 2조1억원, 0.75%p 상승 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647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9.3%를 차지했다. 사실상 자영업자 대출 차주 10명 중 6명꼴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 업종별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 연체율 상승과 상환능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 중심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금통위, 금리 경로 재조정 가능성... 점도표 변화 관심집중

인하 종료-인상 경계선 첫 신호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관련 포인트가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점도표(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성장을 전망은 개선된 반면 물가와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경로 전망이 얼마나 위쪽으로 이동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연 2.50%)가 동결되더라도 점도표가 이전보다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커졌다.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금통위원들의 금리 경로 전망이 상향되는 '매파적(통화긴축 신호) 동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점도표는 금통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점으로 제시하는 통화정책 소통 수단이다. 시장은 개별 점보다 전체 분포와 평균값, 중위값, 상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의 최근 발언은 점도표 상향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유 부총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5월 금통위까지 확인이 된다면 2월 점도표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며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4월 이후 상황에 대해 "경기는 2.0%보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는 2.2%보다 더 높아질 상황"이라며 "금리를 인상 내지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신성환 전 금통위원의 발언도 같은 흐름에 있다. 신 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물가 압력과 미래 물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점도표 상향론의 배경에는 성장과 물가 조합의 변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

I)은 지난 13일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7%로 상향했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동시에 올라간 셈이다.

환율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물가 충격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1490원 안팎까지 올라갔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물가 부담이 커지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고, 이는 원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5월 금통위의 핵심은 기준금리 동결 여부다. 금통위원들의 다음 금리 경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월 점도표가 인하 가능성을 남긴 표였다면, 5월 점도표는 인하 종료와 인상 가능성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첫 공식 신호가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metro

업계 "이번 사태, 제조업 전체 노사관계 영향"

>> 1면 '국가 위기 된 삼전...서 계속

이번 사태의 관건은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DS 부문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현행 '연봉 50%'인 지급 상한선을 폐지에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고수하되, 특별 포상 등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할 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모두 18일 진행되는 자리의 무게를 결

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 정지될 경우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만으로 파업을 막긴 어렵고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제시하고 노조는 파업으로 미칠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국가경제적 파장을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 노사관계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